

데스크 시각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실속 있게



박치경 편집부국장·정치부장

일단 출발이 좋다. 출발 30일(8일)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초반 접수는 후하다. 대통령의 행보에 대중들은 '3패'(유쾌·통쾌·상쾌)의 감정을 느끼며 즐거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첫날부터 소통과 낮은 자세로 국민 가슴에 파고 들었다. 서울 흥은동 자택을 떠나며 이웃들과의 스스럼없이 '셀카'를 찍던 모습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청와대 수석들과 커피를 마시던 장면은 매우 신선했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독단' 때문에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돈 봉투 만찬'에 전광석화 같은 검찰 개혁의 불을 던졌고, 이낙연 총리 등 호남 인재 중용과 잇따른 과격 인사도 쌍수로 환영받았다. 미-중-일-러 특사 파견으로 외교 안보 불안감도 어느 정도 씻어냈다.

대통령 업무 지지 1호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이어 4대강 일부 보의 상시 개방,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화력발전소 섀다운, 남북 관계 개선과 국정원 및 국방 개

혁까지... 적폐 청산과 새로운 나라를 위한 문 대통령의 쾌도난마에 국정 지지도는 80%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태클'은 예상보다 빨랐다. 이낙연 총리와 장관급 청문회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야권의 공세가 시작됐다. 새 정부 출범 보름 여만에 '협치 중단'을 선언한 한국당의 태도는 대선 패배의 뒤를 작렬로도 보인다.

취임 한 달 '3快'로 환호

물론 인선이 완전(퍼펙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생활편의형'이지만 위장전입과 자녀를 둘러싼 잡음 등은 지적받을 만하다. 과거 투기성 주가 변동이나 '갑질'은 아날지언정 허물은 허물이다. 가장 깨끗할 것 같은 문재인 정부에 더 커보이는 측면도 있다.

임기 초반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짙어 불 대목은 있다. 우선 새 정부의 몇몇 '상징적 어휘'다. '완전', '제로', '절대' 같은 단정적 수식어들이 자주 나오는데 조금은 적절스럽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언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고 강한 의지 표명을 위해 '제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사실 대통령은 이런 단어를 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민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하고 지지도를 올

리는 데는 보탬이 되겠지만 언젠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비정규직 문제만하더라도 민간 부문까지 확산해 기업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81만 개 창출도 재정 문제를 수반한다. 그렇다고 물러서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조금 세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정치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이해 당사자 간 해석 차이를 동반한다. 즉 비정규직 입장에서 대통령이 '제로'라고 단언한 만큼 차후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해결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문 대통령 발언은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는 데 전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제로화하겠다고 했으니 안 되면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열정적으로만 가득 찬 아마추어리즘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정권에는 버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학습한 바 있지 않나.

'열정 아마추어리즘' 곤란

적폐 청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리나 부패가 화두에 오르면 '척결'(廓剔·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내 나쁜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 버림)이라는 단어가 따른다. 당장 검찰이나 국방 분야에서 기록권을 바탕으로 노른자위를 차지했던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부당

한 인사나 권한 행사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군내에서는 전두환의 '하나회'에 이어 '일자회', '독사파'(독일 유학 그룹)가 운위되며 인적 쇄신이 예고됐다.

그렇지만 더 수준 높은 개혁이란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완전적인 비위를 막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됐으니 중요 관직은 우리 쪽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틀을 정착시키라는 주문이다.

또 하나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은 '실용'(實用)이다.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시즌 2'라고 부르며 개혁 소용돌이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노무현 정부에서 좀 더 진화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켜켜이 눌러 붙은 때를 씻어내는 것은 당연지사다. 나아가 제발 이전 살림살이 좀 낫게 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새 정부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날마다 상황을 점검하고,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특별히 일자리를 챙기는 것이다. 이 점은 높이 살 만하다. 제법 횡포나 비리를 바로잡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기업을 맹목적으로 옥죄기보다는 생산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용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외교 안보 역시 자주 노선을 토대로 유연하게 실리를 챙겨야 결국 국민이 편해진다.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 5년 후 떠날 때도 칭찬을 받아야 비로소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다.

/unipark@kwangju.co.kr

은펜클럽

다문화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



이병우 단국대 천안캠퍼스 강의교수

생들의 설명은 태연했다. 생각해보니 그렇다.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국가이다. 문화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이것을 새삼 다문화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 일을 계기로 다문화에 대해 얼마나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다문화 시대에 웬 지역 갈등? 영호남문화교류를 위한 시민단체 행사에 있었던 일이다. 광주의 시민단체와 부산의 시민단체가 1년에 한 차례씩 교차 방문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상호 방문을 통한 세미나도 그 중 하나이다. 벌써 20년 이상 이어오고 있다.

몇 년 전 보성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판소리의 고장인지라 세미나 중에 국악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출연한 여성 국악인의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지금 농촌은 다문화 시대인데, 웬 영호남 지역 갈등들이냐? 다문화에 비하면 지역 갈등은 문제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농촌에는 결혼 이주민이 많이 들어와서 글로벌해진다 오래다. 말도 통하지 어렵고 문화도 다른 외국 출신 이민자와 섞여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 타령이나는 것이다. 정말 글로벌한 사고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로벌 지수가 높은 지역이 농촌이란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였다. 글로벌 사고방식의 척도는 외국 사람과 일상생활을 조화롭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가장 앞서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실리론 벨리 기업의 44%가 이민자에 의해 설립.

잘 알다시피 미국의 주요한 힘은 다문화주의에서 나온다. 미국 실리론 벨리의 고급 인력의 상당수는 이민자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실리론 벨리 기업의 44%가 이민자에 의해 설립됐으며, 미국 고교생 대상 과학경진대회에서 본선진출자의 80%가 이민자 집안 출신이다.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에서 온 이민자의 아들이고,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구소련에서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온 이민자이다. 이뿐 아니다. 지난해 노벨상을 받은 미국 사람은 모두 7명인데 그 중에

서 6명은 이민자들이었다.

다문화주의가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의 경험이 인지적 유연성을 기르고 이질적인 것들을 연관 짓는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일이 자의식을 고취하고 스스로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면서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외국에 살면 고향에서 접해 보지 못한 수많은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대하게 되므로 창의적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로 경험인 것이고 세 번째는 흥미로운 기사를 보고 함께 엮어봤다. 싫든 좋든 어쨌든 우리는 다문화의 중심에 있다. 다문화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혼란이 될지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존엄성 회복 출발점,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정형택 민주노총광주본부장

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엄은 '사람 그 자체로서의 인정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지켜집니다. 또한 자존감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때 높아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사람을 '목적 자체'로서의 사람으로 보다는 '목적 위한 수단'으로 삼는 나쁜 풍토가 지배해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당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사회적 부는 재벌과 권력에 돌아갔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2017년 오늘, 국민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사람으로서 존엄성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1994년 OECD 가입 당시 상위 10%는 전체 소득 중 30%도 안되었지만 지금은 45%를 넘어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임금은 66%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0%를 웃돕니

다.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저임금노동자가 25%가 넘습니다. OECD 국가에서 최하위층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헬조선입니다.

경제성장 우선정책, 기업이 잘되어야 노동자도 잘할 수 있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로 포장된 기업우선정책, 사람을 경쟁시켜 상위 순위만 우대하는 정책이 낳은 것이 바로 '헬조선'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공공기관 포함한 노동현장 곳곳에 전파하여 결국 모든 가치의 기준은 먹고살기 위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되었습니다. 소득의 차이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경쟁시켜 서열화하고 차별화하여 또다시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자본의 잔인한 속성입니다. 대기업의 사내 우보금은 비정규직노동자를 늘린 만큼 쌓여갑니다.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의 불균형은 노동자 평균임금 인상폭과 최저임금 인상금액의 차이만큼 늘어납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명제가 판을 칩니다. 그러나 이는 허구입니다. 노동에 대한 혹독한 갈취, 저임금착취를 가리는 술수로 작용하는 논리를 씁니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산다", "노동자의 존엄과 행복이 지켜지는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다" 큰소리로 주장합니다.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워킹푸어층이 확대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콘크리트 과몰구조물로 되어버린 사회, 삶의 질곡을 만나면 구제해줄 복지장치 하나 제대로 없는 사회에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해고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현실, 우리의 공동체가 사람 못살 사회로 변질하여버린 지금, 무릇 공동체가 제일 지켜야할 불변의 가치 '모든 사람의 존엄과 행복할 권리'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노동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최소의 출발점,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가 임금의 인상, 차별의 해소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존엄과 행복'을 회복하는 첫 번째 실천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社說

'국가가 할 일' 명시한 감동적인 추념사

어제 거행된 제62주년 현충일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를 관통하는 단어는 '애국'과 '나라다운 나라'로 집약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 감동적인 추념사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와 동반 입장해 분향했으며 그의 곁에는 4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대신, 국가 유공자들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 모두에서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가난과 독재 자들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0년 동안의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나라를 지켜 온 국민의 애국심이 대한민국의 '정신적 원동력'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편 가르기를 극복하자고 말한 문 대통령은 특히 '나라다운 나라'를 강조했다.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기

억하고 기리겠다"고 했으며 "백골로 묻힌 호국 용사들의 유해,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반드시 찾아내 명예를 지켜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나라가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진보 인사들과 산업화 과정에서 헌신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 여성 노동자 등 평범한 국민도 '애국자'였음을 명시했다.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독립과 호국의 전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자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함과 정의를 해치지 않고 국민을 끝까지 챙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애국을 국민 통합의 '중심 수단'으로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세세한 부분에서부터 국민을 먼저 챙기는 국가의 진정성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동력이자 출발점이다. 국민은 이미 준비돼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락을 뛰어넘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이산가족 아픔 해소도 '국가가 할 일'이다

최고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추진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소식에 알려지면서 지역 실항민들은 하루빨리 성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정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 1988년 1월1일부터 올 들어 지난 5월31일까지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한 광주·전남 지역 시·도민 총 현 생존자는 모두 1409명이다. 전국적으로는 6만1000명인데 문제는 이산가족의 60%가 80세를 넘는 고령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던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 데 주어진 시간 은 이번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은 당사자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두 번의 상봉이 성사됐지만 남북 관계의 현안 문제와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국제 제재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유엔 결의에서 적극적이고 있는 사항이다. 고령화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인도적 현안은 북핵 문제 등 정치 현안과 연계하지 않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하여 "눈을 감기 전에 북녘 피붙이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 보고 싶다"는 이산가족들의 마지막 소망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다.

無 等 鼓	
<p>독일 볼프스부르크와 미국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위기를 맞았을 때의 대처 방식은 전혀 달랐다.</p> <p>볼프스부르크는 12만 명의 시민 중 7만2000명이 폭스바겐 직원일 만큼 자동차 먹고사는 도시인데 1990년대 말 실종 끝에 2001년 합의가 이뤄져 공장 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면서 도시가 살아났다.</p> <p>디트로이트는 GM·크라이슬러·포드 등 미국 '빅3' 자동차 회사가 몰려 있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도시다. 그러나 경쟁력 약화로 생산라인이 하나씩 떠났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GM과</p>	<p>크라이슬러가 파산하면서 지역경제가 무너졌다. 한때 185만 명이던 인구는 68만 명으로 줄었고 슬럼화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전락했다.</p> <p>윤장현 광주시장은 1997년 기아자동차 부도사태 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노사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2014년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광주형 일자리'라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했다.</p> <p>기아차가 광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기아차 정규직 급여의 절반 인을 만들어 실업자 5000명을 월급이 5000마르크인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구상이다.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자동차회사가 노조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p> <p>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예산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직접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친 것이다. 대기업과 귀족노조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p>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월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